

의료 사보험과 건빵

군대에서 신물나게 먹었던 건빵 얘기를 하고 싶다. 건빵은 이 땅의 새파란 청년들이 무릎 팍팍 꺾이는 고된 훈련 중에 말라붙은 입으로 뻑뻑 씹어대던 그야말로 ‘눈물의 요깃거리’였다. 이런 건빵이야말로 군대 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적어도 건빵에는 계급장으로 나뉘는 위계의 층위가 배제된다. 소대장이 먹는 건빵과 ‘꼴따구’ 이등병이 먹는 건빵이 다르지 않았다. 맛도, 규격도 같다. 분배되는 수량도 똑같이 한 봉지씩이었으니 위, 아래 없이 건빵을 씹으며 동지적 연대감을 가졌으리라는 상상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꼴따구 병사들의 생각을 경험적으로 더듬어 보면 ‘어, 소대장도 별박이 건빵을 먹네.’ 라거나 ‘중대장이 저런 건빵 먹어도 되나.’ 라는 인식의 배경에는 짙은 사회적 연대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구호로만 외치거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행동지침과는 전혀 다른 실체였다. 건빵에는 구호가 아닌 실천의 이념이 배어있으며, 이상이 아닌 현실의 이해가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일각에서는 이제 사보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얘기도 솔솔 흘러나온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거나 이런 정책이나 주장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 글·심재익
서울신문 사회부 차장

체계의 근간을 형성해 온 '사회주의적 공공성' 포기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따리를 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나마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이 커보이지 않아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듯 하나 사보험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60~70년대 저개발국과 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의료정책의 무게를 사회주의적 공공성에 뒀었다. 전국 각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해 생활권에서 국민 건강을 보살피도록 했으며,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도 사실은 사회주의적 공적 부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의 지향은 '절대 다수의 절대 건강'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국가가 '절대 다수의 절대 건강'을 빈틈없이 수호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결핵 퇴치나 기생충 박멸사업에서 보듯 '다수의 건강'을 지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만약 이런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장동력이 지금처럼 단시일 내에 역동적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사 이래 보릿고개를 넘길 때마다 우리 걸식하는 난민이 속출했고, 해방 후에는 그나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봄 한 철 넘기려면 시냇말로 '부갯집 개 주전부리하듯 굶주려야' 하는 상황에서 언감생심 누가 의료 수혜를 기대나 했을 것인가. 이런 빈곤 상황에서 초래된 공중 보건의료의 공백을 그나마 큰 충격없이 매워온 게 바로 앞서 말한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즉 공공의료였고, 건강보험도 기실 따지고 보면 명백히 이런 공공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 졌다는 것인가. 뜬금없이 사보험 얘기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숨통을 터주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발상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국민들의 '언 발에 오줌이나 누고 마는'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걱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의 의료보험이 현실적으로는 국민건강을 모두 살피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감기는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치명적인 질환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구식 치료법은 착실하게(?) 수가를 매겨 냈으면서도,

신식 격인 해외 첨단 치료법이나 약제는 수가 조차 책정되지 않아 환자들의 애를 태운다.

그러나 다시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환기해보면 사회주의적 접근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수'를 지향한다. '양질'과 '다수' 가운데서 사회주의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답은 당연히 '다수'이다. 이런 접근방식이 과거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상황,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체계가 절실했던 빈곤한 상황이 지금은 종결된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더는 이전의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를 고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도래한 것인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사보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 중 한 곳이다. 미국에서 보험 없이 병원을 가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초기에 겪는 가장 심각한 불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치료는 커녕 제대로 된 진찰조차도 받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도 실패한 사보험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성취한 것보다 성취의 여지가 많은 개발도상의 나라이다. 국민 소득 1만 5000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분배의 구조적 문제때문에 이 중의 대부분은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극화도 문제다. 보장성을 강화한 사보험이 등장하면 현재 공공 의료보험 가입자 중 돈많은 가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잘 챙겨주는 사보험이 있는데 보장성의 한계가 뚜렷한 공공보험에 목숨을 의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공보험에는 저소득층만 남게 되고,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공공보험은 결국 보장성을 약화시켜 존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일련의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사보험으로 초래될 게 뻔한 데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공공보험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사보험 상품의 제한을 거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번 빗장이 열리면 태풍에 끄덕없던 대문도 한번 빗장이 열리면 실바람에도 쉽게 쪼개지지 않던가.

다시 건빵의 사회성을 돌이켜 보자. 건빵의 매력은 누구에게나 같은 맛, 같은 분량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건빵으로 형성되는 전투력의 원천은 영양분에 있지 않다. 바로 '공평함'이 건빵이 가진 유일하고도 유력한 전투력의 원천이다. 만약 이 건빵의 맛과 양을 계급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가정해 보라. 그 군대 조직이 유사시에 동료애로 무장된 왕성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적 보험보장의 강점은 다수의 보편적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 즉 '건빵성'에 있다. 이런 마당에 공공보험이 가진 '다수'의 미덕을 사보험의 '다양화'로 상쇄한다고 누가 믿을 것인가. 아직은 때가 이르다. 이 단계에서 다시 사보험을 애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의가 문제되는 무책임한 의견의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KHA**